

광주 일부 지자체 ‘문화체험비’ 형평성 논란

지급대상 계약·공무직 제외...차별 조장 비판 복지수당 사용 ‘연차 의무화’ 현실성 떨어져

1년에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주는 ‘문화체험비’ 지급을 놓고 광주 일부 자치구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반직·임기제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 지원되는 복지수당이 청소직 등 공무직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조직 간 차별을 조장해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연차 휴가 의무’ 사용이라는 필요 이상의 규제가 있다보니 코로나 19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내실 없는 복지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광주의 모든 기초 지자체에서

‘문화탐방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광주지역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북구가 최초로 시행한 이래 이달 마지막으로 서구가 시행하면서 5개 구 공무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구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大同소이다.

기본적인 공통 사항은 공무원 본인 또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이 자율적으로 광주 또는 전국 각지에서 문화체험을 진행한 뒤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보고서와 함께 제반 경비(숙박비, 교통비, 식비, 입장비, 체험비 등)의 영

수증을 제출하면 1년에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삶의 질도 높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만들면서 비용까지 지원되니 적지 않은 혜택이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연차 휴가 의무 사용’이라는 의무 조항을 걸면서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까다롭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동구와 북구를 제외한 서·남·광산구는 연차 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3개 구는 “코로나19 이후 휴가를 내기 더욱 어려워지면서 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연차를 제대로 쓸 수 없어 ‘속 빈 강정’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연차 사용이 의무화된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부서에 일이 많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연차를 써본 기억이 거의

없다”면서 “‘자율적’으로 다녀와도 된다고 하지만 애초에 연차를 의무적으로 써야 할 때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셈이니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다른 지자체의 보전 계열 부서 공무원도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서의 직원들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혜택”이라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도 하루 쉬겠다는 말을 입 밖에 못 내는데, 사실상 놀러 간다며 내는 연차에 탈감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나”고 토로했다.

특히 이달 최초 시행으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늦게 도입한 서구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선심성으로 던져준 정책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지난 8월 급하게 계획을 세워 이달 초 의회 추경에서 원스톱으로 통과시켜 곧바로 시행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서구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살핀 뒤 도입한 것이며 연차 사용 의무화 역시 관점의 차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기조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주 5개 자치구에서는 계약직·공무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차별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들 직군의 경우 같은 지자체 소속에 업무도 일반직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더 고된 경우도 많지만,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은아 광주전남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청원경찰도 받는데 같은 직원인 우리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 자체가 차별적인 부분”이라면서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복지에서 여전히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선우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19~28	순천	20~29	광양	20~28
나주	18~30	목포	20~27	여수	21~26

일출 06:26 일몰 18:18
월출 --:-- 월몰 14:44

장성	18~29	축산도	21~25
담양	18~29	구례	19~30
화순	18~29	곡성	18~29
영광	18~28	완도	20~28
함평	18~29	강진	20~29
무안	18~28	장흥	19~28
영암	18~29	해남	19~28
진도	19~27	고흥	19~27
신안	20~27	보성	18~27

목포	만조 07:35 20:48 간조 01:14 12:44	여수	만조 01:50 16:43 간조 09:02 --:--
----	----------------------------------	----	----------------------------------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131

‘전두환 비판’ 고교생 재심서 41년만 무죄

이우봉씨 “묵은 체증 내려가는 것 같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옥고를 치른 이우봉씨(59·사진)가 재심에서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29일 이씨의 계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그 무렵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저지른 헌정 질서 파괴 범죄인 내란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는 게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늦게나마 당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우봉씨는 전북 신흥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동기들과 함께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에 가로막혔다. 이는 이른바 ‘신흥민주화운동’으로 불



린다.

이씨는 같은 해 6~7월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인 전 전 대통령과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

이후 그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며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천 정화활동 29일 오전 광주 무등경기장 인근 광주천에서 열린 ‘광주천 정화활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각종 쓰레기, 오물 등을 수거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학동참사 대책위, 현대산업개발 본사 상경 투쟁

재개발 비리 개입 책임 촉구

광주 시민단체가 학동4구역 재개발 비리에 사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 본사 앞 상경 투쟁을 예고했다.

29일 광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이

하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다음달 1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항의성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비상 규명에 대한 현대산업개발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정몽규 회장과 면담을 추진한다.

대책위는 이날 “학동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이윤만을 위해 재개발 사업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현대산업개발의 비위 행위에 있다고 본다”며 “(불법 행위를) 드러내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는 것이 후진국형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민빈 기자

광주 전직 재개발 조합장 구속

공사 수주 대가로 역대 금품을 챙긴 의혹으로 광주 지역 모 재개발사업 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그는 지난 23일 구속된 광주경찰청 소속 수사관과의 약연이 있어, 경찰은 사건을 다른 수사부서에 배당해 수사해 왔다.

29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 지역은 광주 모 재개발지역 전직 조합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7년 조합장 재직 시절 공범과 함께 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 측에게 1억1,000만원을 받고, 올해에는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받아 갱신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업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광주경찰청 소속 B 수사관(경위)과의 약연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B 경위는 과거 A씨를 불법 행위로 처벌한 전력이 있고, A씨는 B 경위에 대한 비위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올해 검찰로부터 B 경위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경찰은 A씨가 B 경위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A씨 관련 사건을 기존 수사와 반부패재개발수사대가 아닌 다른 형사와 강력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B 경위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인물을 같은 부서에서 수사하면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다른 수사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며 “B 경위가 구속되기 이전부터 검찰과 영장 신청을 조율해온 사안으로 B 경위 구속과 이번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종합철거 전문업체 **삼도산업개발**

원칙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믿음을 드리는 기업

건축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석면 해체 제거업

안전시설물설치 해체 공사

상주 관리

시설 관리
쇼핑 센터 빌딩
아파트경비관리

준공 관리

입주 청소
외벽 청소
소독
확스 작업

삼도산업개발(주) 삼도환경개발(주)
TEL. 062-944-9388, 944-9386